

서울특별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식 출범.. 정책위원장에 김용일 의원 선출



허훈 의원(양천2, 국민의힘)과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촉식에 참석해 제22기 정책위원회 출범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으며 김위원장은 비롯한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김용일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하여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그 성과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위원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위촉식과 전체 회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김용일 위원장은 경영학 석사(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전공) 학력의 소유자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 서울시 신교통기획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공중파(KBS, SBS 등) 방송 및 경제뉴스 부동산 전문가로 70여 회 출연하는 등 실무·현장·학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현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정책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야별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6.30자로 완료된다.

이장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법안 발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최종현·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마침내 청

신호가 켜졌다”며 “이광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본격 시행됐으나,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관 1명이 두 명의 의원을 동시에 보좌하면서 업무 과부하,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지방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은 깊이와 전문성 측면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인력이 배치된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원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사무는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범위와 요구되는 전문성 역시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도민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정책여망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일반 임기제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협의회는 “사무처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과 의원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의 한계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 임기와 함께하는 별장직으로 일괄 전환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민수 기자

수원시의회 국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은 정쟁..즉각 중단하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수)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일 의회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정치적 공세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

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까지 감수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했던 당사자”라며 “이제 와서 지방 이전을 시사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매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김 장관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라는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논란 이후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부 내 엇박자는 기업들에 불화설성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수원 매탄동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개발(R&D)센터, 용인의 생산라인, 화성과 평택 캠퍼스

는 수십 년간 형성된 하나의 유기체”라며 “산단을 뜯어내는 것은 엔진을 떼어내는 것과 달리 수원의 배후 경제권과 청년 일자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 국가산단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H는 2025년 12월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 협의도 20% 이상 진행됐다. SK하이닉스 역시 전력·용수 인프라 공정률이 90%에 달해 착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들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관련 전공자의 73.2%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며 “산단 이전은 곧 핵심 인재 확보 실패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민수 기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국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 개최…

“2026 지방선거 승리 향한 공식 출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통해 단합된 결의로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공식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6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도당 강당에서 ‘2026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김은혜 국회의원 등 당지도부가 참석했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관재 오산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과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 이용호 총괄 수석부대표, 이한국 정책위원장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함께 경기도당의 굳건한 결속과 필승의지를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신년 인사회는 단순한 새해 인사가 아니라, 경기도 승리를 향한 실전의 출발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성과로 구호가 아닌 책임으로 도민의 신뢰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유능한 지방정부 운영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거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강남구의회, 2026 강남구 신년인사회 참석



한윤수·윤석민·황영각·이성수·김형곤·김진경·우종혁·오은누리 의원이 함께했다.

총 2부로 나눠져 약 80분간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는 강남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의 새해 인사 및 “새로운 미래 100년,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강남”의 미래 구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 통해 향후 강남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내일이 곧 강남의 미래”라며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장성 기자

